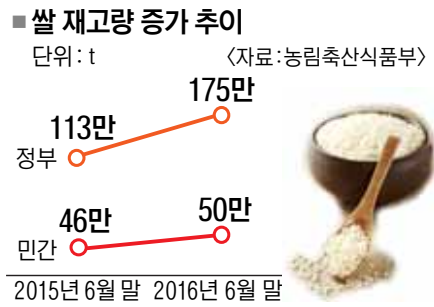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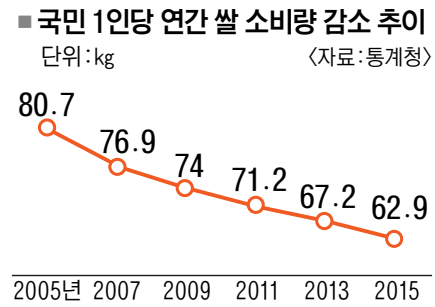


과잉생산→소비감소 ‘악순환’... 대북지원 외엔 해법 없다

‘쌍이는 쌀’ 원인과 대책

1인 소비 10년간 22% 줄어
6월까지 정부 재고만 175만t
가공·수출 확대 등 절실



따뜻한 일한 농부에게 주는 ‘땅의 선물’ 풍년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잉생산 탓이다. 쌀 소비는 줄었는데 해마다 풍년이 들면서 재고가 쌓이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쌀 소비 줄어 재고는 해마다 증가=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고도 매년 한숨만 쉬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쌀 소비량 감소 탓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5년 62.9kg으로 최근 10년간 약 18kg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쌀 소비가 22%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0kg 초반대나 50kg 후반대까지 내려갈 것이라 비판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172.4g으로 분석됐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쌀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쌀 비중(잡쌀 포함)은 1990년 54.4에서 2012년 7.1로 22년간 47.3% 줄었다. 이는 모든 도시가구가 한 달에 1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1990년 쌀 구입에 544원을 지출했는데 2012년엔 71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1990년과 2012년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쌀 소비지출액이 22년간 86.9% 감소

한 셈이다.

반면, 쌀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정부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3만t보다 42만t이 많다. 민간 재고량도 6월 말 현재 50만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46만t보다 4만t이 증가했다.

◇농협 쌀 소비 안감함=농협은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쌀 7000억원어치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3일 현재 판매실적은 3539억원으로 목표의 50%를 이미 달성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1인 쌀 100포 판매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생산된 광주통합RPC(미국중합처리장) 재고 쌀 1600t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쌀 판매 촉진 운동과 함께 일선 학교를 돌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쌀 수출 전략도 마련중이다.

◇대북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나와야=농협과 지자체 등의 쌀 소비 노력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재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북지원은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쌀 재고 처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눈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수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래돼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쌀(2012년산)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정부재고를 적정 수준인 80만t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쌀대책의 핵심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줄여야 산지 쌀값 내림세를 막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2015년산 생산량(432만 7000t) 중 소비량(397만t)을 초과하는 35만 7000t을 전량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묵은쌀 대북지원 재계, 가축 사료와 검도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지역 열악한 쌀 가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관련 제도 마련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농업분야 주요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 지역은 ‘농도’인 만큼 쌀 생산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해마다 되풀이 되는 쌀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진은 17일 오후 광주 서창농협 양곡창고에서 지난해 생산된 쌀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주홍 의원 “해외농업개발 곡물 국내 반입 3.3%에 그쳐”

식량 안보와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지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률이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해외에서 곡물을 확보해 국내에 들여온 반입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3%에 불과했다. 2011~2015년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115만2698t의 곡물을 생산 또는 확보했으나 국내 반입량은 3만8천382t에 그쳤다.

2011년에는 17만t을 확보해 이중 0.5%인 796t을 반입했으며, 2012년 22만t 중 1만t으로 4.8%, 2014년 20만t 가운데 7000t으로 3.6%, 2015년에는 29만t 중 1만t으로 3.5% 수준이다.

지난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진출한 기업 163곳 중 곡물을 반입한 기업은 13개

기업에 불과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식량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해 곡물 수급 불안을 극복 하려고 2009년 도입됐다. 기업의 현지 조 기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해 70% 이내에서 연 2%로 정부가 융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지만 정착 곡물 반입은 미미한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

커지는 ‘건국절’ 논란...與 “법제화 하자”

이정현 대표 “충분히 토론해 보자”
野 “대통령 자격 없다” 반발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언급한 ‘건국 68주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건국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건국절’ 공방 가속화=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축사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박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중진위원 연석간담회에서 “문 대표야말로 일박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연석간담회

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15일”이라며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제화돼서 8·15를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로서 모든 사람이 다시한번 나라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번 충분히 토론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더민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종걸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 건국됐다”며 “(이를 부정해) 국민 전체를 모독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은 한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한국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건국절’ 논란 배경은=‘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정부 수립일(1948년 8월15일)을 건국(대한민국 수립)일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의 국가 선포는 의미가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은 이승만 정부 때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의 3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논거를 내세워 이명박정부 때부터 건국절

지정 운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우선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속돼온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내용을 근거로 들어 건국절 주장에 반론을 펴고 있다. 또 1948년 건국절로 할 경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는 연결성이 약해지며 이에 따라 친일파 복권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또 북한과 다른 나라가 됴으로써 통일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위치와 공과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승춘 보훈처장 유임 참담, 개탄스럽다”

국민의당 광주시당·5월 단체 등 개각 비판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내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17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중진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개 부처를 개각 했는데, 개각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이 쏟아내는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한 재활용 인사, 불통 인사,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동철)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역시 소통과 반성은

없었다”며 “특히 광주시민이 한 목소리로 해임을 요구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유임에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3년 국가가 의결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3년째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임 결정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개각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참가업체 일부 소개 !!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8.19(금)~21(일)

★ 참관 POINT 3가지! ★

- 1. 2016 창업트렌드 파악
- 2. 1:1 무료가맹상담
- 3. 무료 창업 교육 강연

주최 KFA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 전남지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

주관 제일중업진흥

1대 2인 무료입장권